

| 3차 노사정대표자회의 |

3차 노사정대표자회의,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방안’ 도출

이세종 전문위원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문성현 위원장, 그리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박태주 상임위원(간사)은 4월 23일(화) 오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세 번째 노사정대표자회의를 가졌다.

이날 노사정 대표자들은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방안’에 합의했다. 앞선 2차 대표자 회의에서 사회적 대화기구에 대한 큰 틀의 방향설정에 합의했다면 이번엔 법률안 마련을 염두에 둔 구체적인 합의였다. 합의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3차 노사정대표자회의의 결과〉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방안 합의 의제별 논의 5월부터 본격 시작

2018년 4월 2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주영 위원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명환 위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 그리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문성현 위원장은 한국노총에서 제3차 노사정대표자회의를 개최하였다.

노·사·정 대표자들은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방안, 의제별·산업(업종)별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해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첫째,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방안과 관련하여,

- ① 명칭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한다.
- ②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노동자대표 5명(한국노총, 민주노총,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 사용자대표 5명(경총, 대한상의,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 정부대표 2명(기획재정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사회적 대화기구 대표 2명(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상임위원), 공익대표 4명 등 총 18명으로 확대한다.
 ※ (기존) 10명 → (개선) 18명
 ※ 필요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특별위원으로 위촉
- ③ 사회 각 계층이 직접 참여하여 의제 개발, 정책 제안 등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비정규직위원회, 여성위원회 및 청년위원회를 우선 설치하기로 하였다.

- ④ 현행 상무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노·사·정 위원으로만 구성하여 노사 중심의 협의 기능을 강화한다.

※ (기존) 상임위원 + 노5 + 사5 + 정2 + 공익2 → (개선) 상임위원 + 노2 + 사2 + 정2

- ⑤ 지역별 대화체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기능과 사무처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노·사·정 대표자들은 위와 같은 합의 내용을 반영한 새로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을 마련,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최대한 경주하기로 하였다.

둘째, 의제별 위원회는, ▲경제의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 위원회, ▲안전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 위원회, ▲사회안전망 개선 위원회,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법·제도·관행 개선 위원회’를 5월부터 발족한다.

셋째, 업종별 위원회는, 그간 제안된 해운·버스운송·금융·공공·자동차·조선·민간서비스·보건의료·건설·전자·제조 등의 산업·업종을 중심으로, 관련 노·사·정 간 논의를 통해 가까운 시일 내에 대표자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노사정대표자회의의 역할을 모색한다.

노사정대표자회의는 노·사·정이 모두 참여한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지난 1월 31일 출범하였다.

그간 11차례의 실무협의회, 5차례의 운영위원회, 3차례의 대표자회의를 통해 사회적 대화기구의 개편방안과 주요 의제에 대한 논의 구조·방식 등에 대하여 긴밀하게 논의해왔다.

이번 제3차 대표자회의에서는 첫 과제인 사회적 대화기구 전면 개편안에 대하여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 양극화 해소 등 우리 사회의 시급하고 중요한 의제를 논의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되었다.

앞으로도 노·사·정은 다름을 존중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구동존이(求同尊異)의 자세로 이제 막 물꼬를 튼 사회적 대화를 이어나갈 것이다.

제4차 노사정대표자회의는 5월 중 민주노총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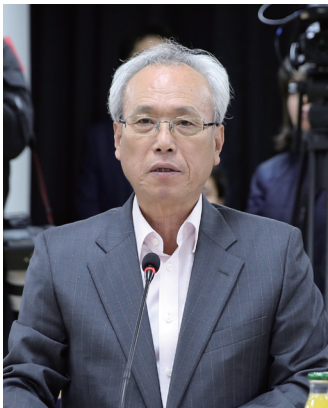
2018년 4월 23일

노사정대표자회의

본격적인 회의와 합의 도출에 앞서 노사정 대표자들은 다음과 같이 인사말을 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각 주체들은 사회적 대화 지연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한다. 자칫 기회를 놓치게 되면 사회적 대화를 시작조차 할 수 없거나, 시작 후에도 논의 시한이 단축되는 문제가 생긴다. 4월 법안 제출, 5월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출범하여 노동존중사회 의제를 논의하는 결실을 맺을 수 있길 바란다. 이를 위해 중앙 노사 단체의 노력이 필요하며, 한국노총도 책임과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다.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지난 3달 동안 4차 산업혁명 등 우리 사회 주요 의제와, 산업·업종의 문제에 힘을 모으고자 노력해왔다. 오늘 한국

GM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 노사가 협조하고 정부 역할이 제대로 있으면 못 풀어낼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 오늘 합의를 통해 노사정위원회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서 새로운 골격과 토대를 갖추게 되어, 향후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될 수 있으리라 믿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노동계와 소통하겠다. 취임 2달 동안 한국노총을 3번 방문했고, 조속한 시일 내 민주노총도 방문할 예정이다. 오늘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을 위한 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자리인 만큼 오늘 회의에서 현명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법 개정이 조속히 되길 바란다. 사회적 대화의 핵심과제는 일자리 창출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2가지가 되어야 하며, 특히 청년의 일자리 상황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노사정 모두 고통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청년의 염원에 부응해야 한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함께 하는 데 이해해 준 다른 주체들과 특히 한국노총의 배려에 감사한다. 우선 세 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첫째, 사회적 대화의 취지에 맞게 협의를 통해 신뢰 축적에 충실하길 바라고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도 노사정 협의를 통해 진정성 있는 기구로 거듭나길 바란다. 둘째 양대 노총의 중추인 공공부문에 대해 특별한 논의를 요청한다. 끝으로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량해고 사태, 먹튀 자본에 의한 노동자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 대화기구가 역할 해야 한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청년 고용상황이 매우 어려우며, 주력산업의 경쟁력도 예전과 다르다. 쌓여온 구조적 문제들에 지혜와 마음을 모아가는 이상의 해법은 없을 것이다. 상당 부분 의견을 모아갔던 지난 회의 때처럼 오늘도 좋은 결실을 기대하고 있다. 큰 방향성에 집중해서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도 다양하게 격식 없이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문제인 정부가 지향하는 사회적 대화다. 청년 일자리 문제가 어느 때보다 어렵고, GM도 노사 교섭 중이며, 우리 경제와 노동자, 국민들의 삶이 점점 팍팍해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기구가 조속히 개편되어 이러한 문제들을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을 최근 더 실감하고 있다. 아직 우리 갈 길이 멀기에 앞으로도 충분히 숙성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서두르지 않고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음은 문성현 위원장(이하 문성현)과 박태주 상임위원(이하 박태주)이 참여했던 기자단 브리핑에서의 일문일답이다.

확대되는 참여주체들의 대표성은 어떻게 담보하나?

확대된 근로자와 확대된 사용자는 각각 노동계와 경영계에서 추천하기로 했다. 추가로 늘어나는 공익위원 4명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위원장이 노사단체 의견을 들어서 대통령께 제청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태주)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의 의결 정족수는 무엇이 바뀌나?

의결 구조에 있어 의사정족수는 2분의 1이, 의결정족수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있고, 각 노사정 대표가 2분의 1이상 참석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있다. 새롭게 바꾸기로 한 의결구조는 노사정이 역시 각 2분의 1 이상이 참석하는 것이 전제고, 의결정족수도 3분의 2로 했지만, 의사정족수는 과반수에서 3분의 2로 강화했다. 그것이 차이점이다. (박태주)

민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공식 멤버가 되는 것은 하반기 대의원대회를 통해서 결정할 방침이라는데 그렇다면 공식적으로 들어와 있다고 봐야 하는 건지.

양대 노총은 현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공식 참여 입장이 아니다. 대표자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의 경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정식 참여하는 문제도 당연히 대의원대회를 거쳐야 한다. 곧 5월이고 하반기도 얼마 남지 않았다. 절차상 과정이 남아 있지만, 현재 의제별 내용이나 업종별 내용을 놓고 보면 다양한 내용들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포함한 각급 조직의 요구를 받아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의원대회를 거치더라도 민주노총이 책임 있게 그리고 내용 있게 결합하는 데는 문제가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문성현)

회의장소를 노사가 번갈아가며 하는 걸로 들었다. 다음 대표자회의가 경총으로 잡혀있던 것으로 들었는데, 민주노총으로 정해진 이유는?

민주노총이 어떻게 할 것인지 다들 궁금해 하고 있고, 기왕에 의미 있게 출발한다는 차원에서 다음 회의는 경총과 다른 주체들이 양해해준다면 민주노총에서 하는 게 좋지 않느냐고 제가 제안해서 그렇게 됐다. (문성현)

합의문 뒷장에 구조조정 관련해서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역할을 모색한다고 포괄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 민주노총이 요구했던 구조조정특위라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합의됐는지.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개별 기업의 근로 조건에 대해 사회적 대화기구가 참여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에 대해 의견 합의를 이뤘다. 그렇지만 개별 기업을 뛰어넘는 산업정책의 차원에서 노동조합이나 경영계가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사회적 대화기구의 참여 필요성에 대해 노사정대표자들이 다 공감을 했다. 산업정책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입할까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하기로 했다. (박태주)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의 공식 성격이 합의기구인지 협의기구인지, 그리고 입법은 어떻게 되는지.

사회적 대화기구는 공식적으로 협의기구이다. 하지만 합의가 가능한 지점에서는 합의를 위해 노력할 수 있다. 아까 말한 의결정족수 3분의 2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충분히 협의를 거치면 책임 있는 의결을 하는 기구로 이해해 주기 바란다. 입법과 관련해서는 법률안도 다 마련되어 있다. 내일 바로 실무협의회에서 논의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당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전달하고, 어떤 과정을 거칠 것인지 논의할 예정이다. (문성현)

그럼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의 공식 출범은 언제쯤으로 예상하는지.

저희는 5월이라도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길 원하고 있지만, 알다시피 국회 상황에 대해 예단하기는 어렵다. (박태주)

계층별 위원회의 성격과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비정규직·여성·청년위원회를 운영위원회 산하에 해당 구성원으로 설치하고, 거기에서 제반 정책과 상정할 수 있는 의안들을 논의할 계획이다. 구성과 관련해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박태주)

결국 위원이 18명으로 늘어나는데, 의결권은 1분당 1표를 가진다고 보면 되는 건지? 그리고 공익위원을 4명으로 늘리게 된 계기가 있는지.

당연히 1표씩 행사를 하게 된다. 공익위원을 4명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기존의 노사정위원회가 사회적 대표성을 얼마만큼 충분히 발휘했는가에 대해 여러 가지 의문들이 제기돼 왔다. 저희들이 18명으로 확대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지만, 사회적 대표성을 높임으로 인해서 사회적 정당성을 조금 더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구성원의 확대를 추진했다. 그 과정에서 공익위원도 4명이 됐다고 우선 말씀드리겠다. (박태주)

구조조정과 관련개별 기업별 차원에서는 논의하지 않고, 그걸 뛰어넘는 차원에 대해서 필요에 따라 참여하겠다고 말씀하셨다. 현안 가지고 여기서 논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기 같은데, 그게 나름의 원칙으로 자리 잡은 건지.

오늘 이야기 된 것은 개별 노사관계의 노동조건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산업 업종별 논의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산업·업종별 위원회의 토론을

바탕으로 노사자율로 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된다.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내셔널 센터의 관계를 기본으로 운영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다. (문성현)

대표성 관련해서 중소·중견·소상공인 보다는 청년·여성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가 많은 관심이었다. 이 두 가지는 양대 노총이 알아서 추천을 하거나 뽑아오면 그대로 따르겠다는 건지.

청년·여성·비정규직 관련해서 조금 토론해야 될 지점이 있지만, 그냥 청년일반 여성일반이 아니라, 청년노동·여성노동·비정규노동 이렇게 정리해 드리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논의를 모아가야 되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청년노동조직·여성노동조직·비정규노동조직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다양하다. 반면 중소·중견·소상공인은 대표성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양대 노총이 당사자들과 논의해서 대표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방식으로 추천해 달라는 요구이다. (문성현)

업종별 위원회는 업종의 문제 또는 대·중소기업 간 격차해소 문제 등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구성원은 어떻게 꾸려나가실 건지.

의제별 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업종별 위원회도 원칙적으로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업종별 위원회가 노, 사, 정부가 필요하다면 정부가 참여하기로 해서 구성되면, 원칙적으로 그 차원에서 의제와 로드맵, 운영 방식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문제지,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일일이 간섭해서 지시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박태주)